

[CONTENTS]

시민사회 제4호 / 2001 · 가을

기획특집 I - 한국의 시민운동, 전환기인가?

- 3 한국의 시민운동은 위기(서경석)
- 10 왜 우리는 2002년 지방선거에 참여하는가?(최 열)
- 17 한국 시민운동의 걸림돌과 디딤돌(이정옥)
- 25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유석춘)
- 32 한국의 시민운동, 과연 전환기인가?(이창호)

기획특집 II - 시민운동계 양대산맥 불꽃 논쟁

- 39 시민운동계, 충고 겸허히 받아들여야(이석연)
- 40 시민운동은 시대를 앞서가야(박원순)
- 42 토론/ 지금은 시민사회의 힘을 키울 때
 -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양면성이 있다
 - 시민운동 안에서는 문제점 잘 못봐
 - 시민단체의 권력은 일부에만 있다
 - 국민대통합 위한 대화제기 필요

- 46 특집논단 시민사회 사상사 개관(김경동)

- 65 해외의 시민사회 ③ - 영국
 - 시민사회 이끄는 두 수레 - 자선공익단체들의 활동(조효제)

- 74 시민사회동향

- 76 자원봉사계 동향

- 77 제8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이모저모

- 78 해외의 시민운동 사이트 ② - 세계의 환경운동 NGO 1

- 79 국내외 신간

- 발행인 이제훈
- 편집인 한남규
- 발행처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서울시 중구 순화동 7번지 (100-759)
Tel : 751-9453~9456, Fax : 751-9688
E-mail : ngo21@joongang.co.kr
http://ngo.joongang.co.kr
- 디자인 행복한책읽기(2277-9216~7)

④ 한국 시민운동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 권력 견제보다 권력 잡겠다 나하면 간판 바꿔달아야

유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1. 시민운동의 의의와 재정독립

우리는 사회를 서로 구분되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강제력의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문이다. 이 영역의 특징은 권력의 행사를 통해 타인의 의지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군대와 경찰은 이 영역의 기능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강제력의 합법적인 장치다. 둘째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이해 관계를 기초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기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특징으로 한다. 기업의 영리 추구는 물론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셋째는 앞의 두 가지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의 나머지 기능, 즉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권력 관계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윤 추구도 아닌, 인간의 다양한 행동이 표출되는 사회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비정부·비영리 영역' 혹은 '제3의 영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공간은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 조직, 학교, 가족, 시민단체, 연고집단 등이 바로 이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 영역은 서로 다른 발전의 궤적을 밟아 왔다. 우선 '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 시장의 경우 특히 최근에는 나라의 경계를 허물며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흐름은 바로 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가 국경을 뛰어넘으며 전개되는 현상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시장 다음으로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 온 영역은 '정부'다. 편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권력이 '민주화'라는 대세를 거역하면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군부 통치가 퇴조하고 대신 선거에 의한 민간정부가 수립돼 왔다. 한국·대만·필리핀·태국 등이 예가 된다. 또한 1989년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연쇄 붕괴도 크게 보면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추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의 민주화는 이제 필연의 경향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앞의 두 영역과는 달리 '비정부·비영리 영역'은 동질화와 이질화를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의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으로 학교 교육과 같은 측면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는 거의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이 영역의 동질화를 추동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종교와 같은 신앙 생활의 측면에서 이 영역은 수렴은커녕 오히려 간격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뮤얼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은 바로 이러한 이질화의 맥락을 강조하는 개념일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쇠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문화적 규범이 갈등하는 곳은 바로 이 '제3의 영역'이다. 서로 다른 생활 양식과 관습, 역사와 문화, 제도와 선호로 인해 이 영역은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이

는 쟁점이다. 시민운동단체는 조직의 특성상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해야만 한다. 만약 시민운동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의 '세금'이나 시장의 '이윤'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시민운동단체는 더 이상 '비정부 비영리 영역'에 속하는 범주로 존재할 수 없다.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운동이 산업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공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가를 견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적 독립이다. 최근의

시민운동이 산업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공의 이해를 대변하고 국가를 견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재정적 독립이다.

혼란은 기독교와 유교 혹은 회교와 같은 인류의 위대한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더욱 손쉬운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재야 출신 정치인들이 권력의 핵심에 포진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대학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구'라는 전공을 대학원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서구와 같은 시민사회의 건설이야말로 우리사회의 '제3의 영역'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분명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대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과연 '정부'나 '시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

여러 움직임 특히 시민운동의 형식을 갖추어 추진되고 있는 '제2전국운동'과 같은 관변운동이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되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2. 이중적 모습의 '운동권'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등 이른바 우리가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집단의 역할이 갈수록 애매해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이들은 소외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제도권 정치와 정부를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87년 이후 성취한 민주화는 이들의 기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독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선택한 삶과 죽음은 누가 보아



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숙연한 모습이였다. 70년대 전태일과 김상진이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정신과 비판정신은 80년대로 이어져 결국에는 철용성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드디어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의 햇볕이 쬐이는 양지로 만들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은 학원과 거리에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지속했다.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산업현장은 물론 거리에서 펼쳐왔다. ‘동기와 결과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은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적극적 현실참여를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운동에 의한 문제 해결만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제기와 비판정신, 나아가서 저항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유지되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정의와 균형마저도 우리는 지킬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운동권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었다. 운동권이 권력과 부에 영합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

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비판의 대상에도 성역이 없었다. 인권과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나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도 비판의 칼날이 비껴가지 않았다. 분배의 정의와 기회의 균등을 기준으로 운동권은 기득권 집단, 특히 권력과 금력, 그리고 이들의 아합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전혀 달라 보인다. 최근 운동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까지의 역할과는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면서 이른바 운동권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자.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면 2000년 4월 총선을 거치며 여권은 조직적으로 선거에서의 부정을 축소 및 은폐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동시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권력의 개입 없이 은행의 지점장이 거액의 대출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의혹을 수사해야 할 검찰은 어물쩍 사건을 덮으려 한다. 이에 반발해 야당은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으로 나섰다.

과거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학생운동·시민운동·노동운동 등의 이른바 운동권이 들고일어나 한편으로는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적 관심을 모아 저항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이다. 야당의 장외집회에 협력하여 청중을 동원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입장을 천명한다. 국민적 저항과 정부 여당의 입장이 마주 오는 기관차처럼 부딪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진다. 바로 이런 과정의 주역이 운동권이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마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권

은 꿀 먹은 벙어리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학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온갖 자질구레한 일에도 서명운동을 벌이던 시민운동 단체들은 전혀 나서질 않는다. 노동운동 역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조폐공사의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니 어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치부해야 할 판이다.

온갖 시민운동 단체가 연합하여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며 정치개혁을 선도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또한 송자 교육부 장관의 개인적 자질을 문제삼아 하루에 한 건씩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던 시민운동 단체의 모습은 어찌된 영문인지 안동수 법무부 장관의 '충성메모' 사건이 터지면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청와대 비서관의 신공항 개발을 둘러싼 비리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3. 낙천·낙선운동과 시민단체

200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정가를 달구었다. 변화를 원하는 쪽에서는 기대가 컸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았었다. 과연 시민운동은 성공하였는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시민운동은 일단 문제 제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



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현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은 곧 다른 후보에 대한 당선 운동과 다름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낙선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현재의 선거법은 사회세력의 선거참여를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 단체를 비롯한 기타 사회단체에게는 참여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현재의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단체의 선거참여 문제에 확실한 선을 그어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공익의 대변자로 스스로 자임한 시민단체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결성된 이익단체,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비영리 비정부 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와 같은 각종 연고 집단이 모두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나 종교단체는 물론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보편적 '공익'을 추구하고 이익단체나 연고집단은 파당적 '사익'을 추구하니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한다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누

가 부여했는가. 아무도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 자임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익단체도 얼마든지 스스로의 활동을 공익으로 포장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발전을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강원도가 단결해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그런가. 절대적인 기준을 절대로 찾

을 수 없다.

낙천운동은 또한 선거의 공천과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낙천운동의 대상이 된 정치인 가운데 여당에 소속된 경우와 야당에 소속된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여당은 물갈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다. 반면에 야당은 공천에서 배제된 경우 은퇴하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뿐이다. 여당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와 여당이 담합했다는 야당의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명단'에 들어간 사람이 정부의 요직 혹은 정부의 산하 단체에 낙하

는 배신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시민운동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권력논리나 시장의 이윤추구 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구성의 논리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운동이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발상은 시민운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동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시민운동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터였다. 김영삼 정권과 김

시민운동이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것이 국가의 권력논리나

시장의 이윤추구 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구성의 논리를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운동이 정치에 참여해서 권력을 잡겠다는 발상은 시민운동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만큼이나 자가당착적인 행동이다.

산 식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걸 밝히지 않으면서 선거에만 개입하겠다는 생각은 즉흥적인 사고의 결과일 뿐이다.

4. 감시자로서의 시민단체

시민운동 내부에서 현재의 시민운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이 2001년 8월 경찰대학 특강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움직임은 지금까지 쌓아온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순수성을 해치고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

대중 정권이 차례로 집권하여 과거 민주화투쟁 당시의 동지들인 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권력의 실세로 포진시키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민주화 이후 정·관계의 요직으로 진출한 운동권 인사의 비중은 아마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관계의 요직으로 진출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비중과 비교하여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생한 각종 권력형 비리에 시민운동이 과거와 같이 끈질긴 비판과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도 이런 사실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자임한 시민운동의 중립성과 치열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 모습을 여러 차

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의 육사 출신이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듯이, 요즘의 시민운동은 민주화된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관변화'는 특히 최근의 '언론개혁'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정치적 의도를 명백히 읽을 수 있는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검찰수사 과정을 일부 시민운동 단체들이 앞장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홍위병' 이냐는 의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일 뿐이다.

"시민단체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참여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만 권력이고 지방정부는 권력이 아닌가. 풀뿌리 수준의 권력이 오히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는 더욱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각종 인·허가 등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권력의 단맛을 보려는 시도는 저지되어야 한다. 개혁의 탈을 쓴 권력의 홍위병을 저지해야 하는 것처럼.

시민단체가 권력견제보다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면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

'시민운동단체'가 아니고 정치집단, 즉 '정당'이라고 밝혀야 한다.

'무늬만 시민운동'은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일 뿐이다.

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시민운동의 관변화'마저도 국민들은 무작정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권력을 견제하고 시장을 감시하는 시민운동 본래의 순수한 모습이 지켜질 때 국민들은 시민운동에 적극 공감하게 된다. 시민운동이 권력에 편승하고 나아가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민운동이 아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운동'만으로는 도저히 한국사회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이 부조리한 한국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 '시민운동단체'가 아니고 정치집단, 즉 '정당'이라고 밝혀야 한다. '무늬만 시민운동'은

5. '한국적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의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를 논할 때, 주로 지적되는 문제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이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과정이 서구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서구의 시민운동을 모델로 한 현재의 운동방식은 많은 한계와 취약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서구적 의미에서의 시민사회를 기준으로 한국 시민사회를 보면 그것은 분명 왜곡되고 취약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특히 권위주의 정치체계에 의해 국가중심의 역사적 전통이 근·현대사를 통해 재생산됨으로써 시민사회는 분명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

성을 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성의 근원이 되는 시민사회의 문화적 및 제도적 기초를 밝히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적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시민사회 내의 특정한 가치체계나 생활양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규범적인 판단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서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것과 같은 시민문화는 한국의 전통적 공동체 의식에서도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통적 공동체 문화의 한 측면인 상호 부조(扶助)의 관행이다.

상호부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사회·문화적인 의식과 생활양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관행은 밀착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교환의 한 특징적 모습이다. 이는 때로 주민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사회적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이를 인정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기준으로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적 토양이 척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전통윤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지향적인 성격을 발견하고,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시민사회의 활동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서구의 '시민사회론'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분명, 권력이나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구성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을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단체의 출현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라는 서구적 시각을

척도로 보면, 한국 시민사회는 분명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왜곡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의 차원에서 한국을 보면 다른 어느 사회보다 오히려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력한 사회가 한국사회이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경제적으로 시장질서가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여전히 자신이 속한 가족과 그것의 보다 확대된 형태인 혈연, 지연, 학연단체와 같은 연고집단에 강한 애착과 헌신을 보이는 우리의 정서가 바로 우리 시민사회의 독특한 배경이다. 심지어는 시민단체의 자원동원과정도 이러한 연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회원의 참여과정이나 시민단체 활동가의 충원



방식에서도 연고적 동원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연고집단은 부정적 단면과 함께, 국가나 기업이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의 시민사회는 오히려 공동체적 관심과 배려를 무한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